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3/7℃ 목포 3/7℃ 여수 4/7℃

단기 4343년 (음력 1월 24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18호 1판 2010년 3월 9일 화요일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 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덫에 걸린 민주당

개혁공천 한다더니 배심원제 석달째 자중지란

민주당의 6·2 지방선거 공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주류와 비주류가 충돌하면서 자고나면 경선 방법과 시기가 바뀌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적용기준 없고

혼란의 배경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 공천이라며 도입하려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자리 잡고 있다. 반 이명박 야권 연대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 석 달 째 논란 중인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덫에 걸린 모양새다.

◇**전략공천 해석 논란**=시민공천배심원제는 전략공천 30% 범주 내에서 실시하기로 당규에 제시돼 있다. 하지만, 전략공천의 범주에 대한 해석이 최고위원에 따라 크게 다르다. 대표적인 예가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다.

박주선 최고위원 등은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고 쟁쟁한 후보들이 나선 광주를 '시장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식 밖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 남구청장과 무안군수 경선 등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달라 갈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전략공천을 통한 시민배심원제 도입이 가능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지역은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류 측은 광주시장과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부터 혁신 공천 방법인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 전국적인 흥행을 일으켜야 하며 이는 전략공천 범주에 포함된다는

계파 갈려 다투고

입장이다.

◇**정치적 이해 충돌**=시민공천배심원제는 특정 후보에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정치적 이해 관계 충돌로 번지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대해 예비 주자들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 리고 있다. 이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이미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 순천시 등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사이가 원만하

공정성 보장 못하고

지 않은 지역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설이 확산되면서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비주류 일각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의 배경에 주류 측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성 담보 논란**=학연·지역·혈연으로 맺어진 사회적 특성상 배심원단이 과연 중립적 입장을 지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배심원단이 200명이라는 소수로 구성됨에 따라 10~20명만 확보해도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외면하고

또한, 전문배심원단에 대한변협, 정치학회 등 중도적 성향의 전문가 그룹이 상당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배심원단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정치 성향으로 편향되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 배심원단의 연령대 비율 구성도 문제다. 민주당은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5단계로 연령 비율을 구성했으나 60대 이상 등의 연령대 확보가 어려워 19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으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단체장 2~3명 내사

이대통령 지방선거 앞두고 토착비리 차단령

이명박 대통령이 8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토착비리 세력들에 대한 '차단령'을 내림에 따라 수사기관의 선거 관련 사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불법 선거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검찰이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최인기 의원 등 옛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공천헌금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2~3명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검은 이와 관련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19명(검사 3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운영 중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대검찰청의 선거사범 수사 인력 보강 방침 이후로만 4명이 늘어난 것으로, 다음달부터 전담 검사 충원 등을 통해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6·2 전담반을 편성한 이후 금품선거와 거짓말 선거(사이버상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아왔다.

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전남 선관위는 올 들어 3월 8일까지 불법선거 사례 218건(광주 32건, 전남 186건)을 적발하고 사법 처리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도 토착비리 수사를 토대로 한 불법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전남 경찰은 지난해 말까지 1차 토착비리 단속에서 각각 26건(141명), 53건(276명)을 검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토착비리와 관련된 인물들이 공천을 받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강도높은 선거 관련 사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혼탁 사례, 불법 선거로 인한 재보선, 선거 후 당선자들의 비리 등이 모두 토착비리 세력들의 조직적이고 은밀한 선거 개입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남구청장·무안군수 배심원제 적용

민주 광주시장·여수시장은 계속 논의키로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시장, 광주 남구청장, 전남 무안군수 후보 등 전국 9개 지역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관련 기사 3·4·5면〉

광주시장과 여수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는 광역단체장 경선은 대전 1곳, 기초단체장의 경우 광주 남구와 전남 무안, 전북 임실 등 호남 3곳을 포함해 서울 은평, 경기 오산과 화성, 인천 연수, 충북 음성 등 8곳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인 대전시장 후보 선출은 시민공천배심원제와 당원 전수조사가 50%씩 반영되며 기초단체장은 시민공천배심원제만으로 후보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대상으로 검토돼 온 광주시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우 대변인은 "추가 논의를 통해 2차 대상 지역도 선정할 방침"이라며 "금주 중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지역 선정을 마무리짓고 경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일정은 ▲이달 27일 대전▲4월4일 경기▲10일 광주▲11일 전북과 제주▲17일 전남▲18일 인천▲24일 강원과 영남▲25일 서울로 확정됐다. 단수 후보 지역인 충남과 충북은 오는 20일 전에 후보 선출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앞날은… '회생이냐' '파국이냐' 금호타이어가 생사의 기로에 섰다. 8일 오전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노조원들이 모여 고심하고 있다.

▶관련 기사 4·8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30년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센터 이전으로 금융거래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일시 중단됩니다
금융거래 일시 중단시간
· 2010년 3월 13일(토) 02:00 ~ 24:00
일시 중단 서비스
· 자동화기기(ATM)
· 인터넷뱅킹, 폰뱅킹
· 체크카드 거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 자기앞수표 조회 등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고객만족센터
(062)239-5000, (1566)3388, (080)4000
KJB 광주은행